

공공부문 임금삭감,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5월 30일 하루에만 철도공사·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11개 사업장에서 이사회를 강행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한다며 노조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도 여러 곳에서 사측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 추진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며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순전히 거짓말이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도 키울 것이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바꾸는 데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다.

게다가 사용자들은 성과연봉제로 노동자들을 더 손쉽게 통제하려 한다. 더 나아가자

성과자 퇴출제도 도입하기 쉬워질 것이다.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 기업에도 시급히 확대해,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금융위원장은 9개 금융 공기업들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후, '이제 민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것을 함께 막아야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도 약화시킬 수 있다. 잘 조직된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들에서조차 공격을 막지 못하면,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에서 공격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수익성 논리와 경쟁을 강화해 공공서비스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한 피해는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키고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19세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외주화를 중단하라

이번 구의역 19세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망 사고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추구 정책이 만들어 낸 예고된 참사다.

스크린도어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이로 인한 잦은 고장, 비용 절감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등이 얽히고 설켜 참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게다가 불과 9개월 전에 강남역에서 벌어진 비극이 그대로 재현됐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취한 조처는 부족인력에도 못 미치는 생색내기 인력 충원뿐이었다. 이번 사망 사고 후에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방지책은 자회사 전환이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외주화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현재 자회사로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ENG 노동자들은 "업무 지시와 관리 등에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정규직 노동자들

과의 유기적 협업에도 지장이 있는 자회사 하에서는 결코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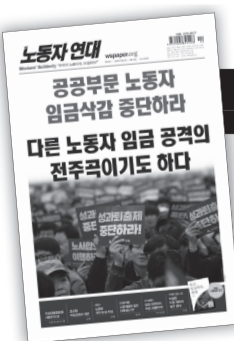
현재 지하철은 외주화된 업무를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철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 인력이 부족해 선 노동강도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양 지하철 통합 방안으로 1천29명의 정원 감축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이 통합안은 지하철 노동자들의 거부로 보기 좋게 폐기됐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애초 추진하려던 수준으로 긴축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협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외주화를 금지하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이를 강제하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잘 조직돼 있고, 투쟁의 경험이 있는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외주화의 직영화와 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16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마시즘 2016

7월 21일(목)~24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전체 주제와 연사를 확인하고
참가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spaper.org>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시키기 위해 싸울 기회는 아직 있다. 막가파식 강행 처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도 크다.

사측은 일방 추진을 사후에 정당화하려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라거나 노조에 합의하라고 종용할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대규모 항의를 조직해 이사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이를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회의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6월 18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에 1차 파업을 벌이고 9월에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강행 의지가 분명했는데도 공공운수노조 등 주요 노조의 지도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은 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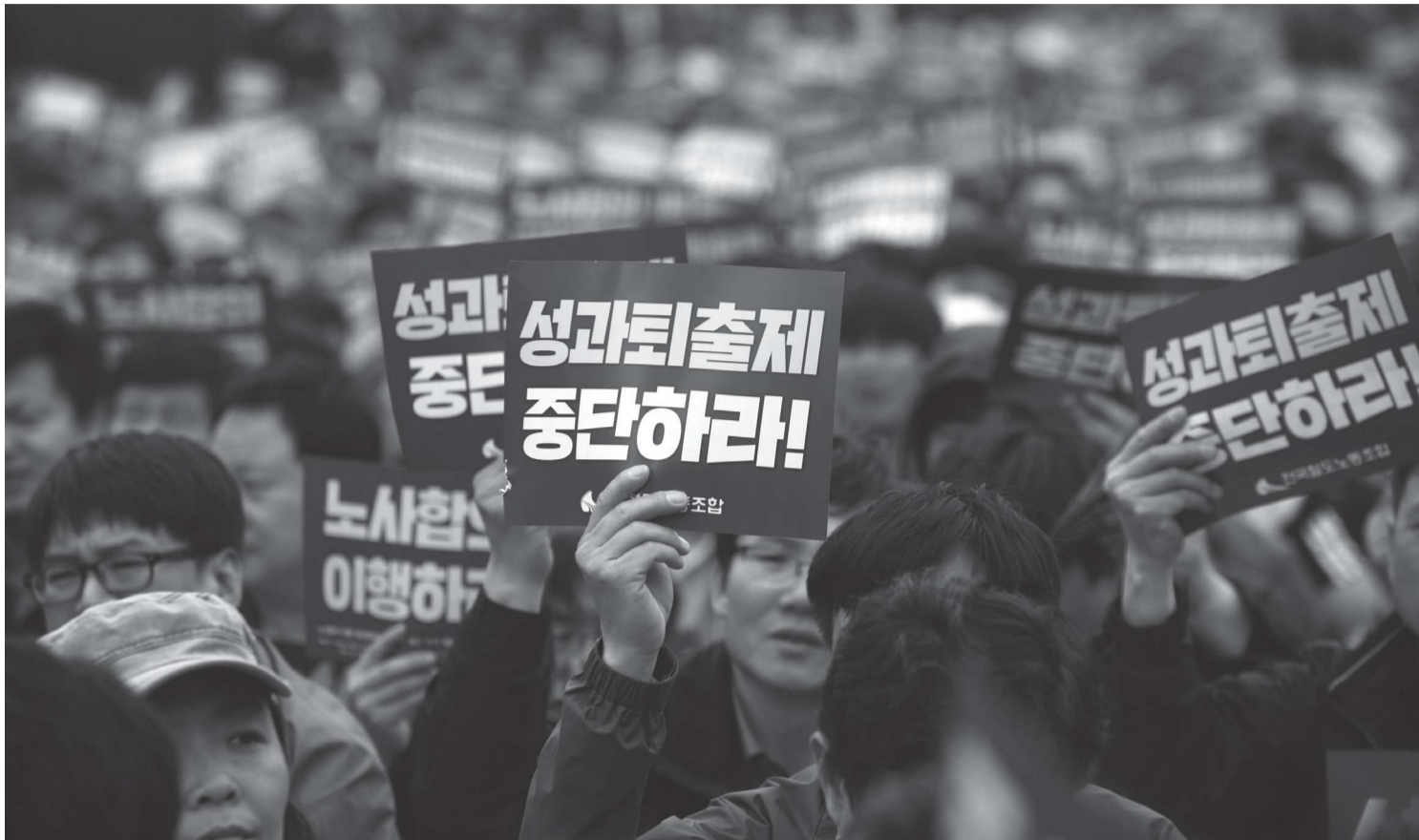
이미 정부는 5월 초부터 금융 공기업들에 강공을 폈고 급기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이 일방 강행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박근혜가 주재하는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앞두고 강공을 펼 것이라는 점은 매우 명백했다.

그런데도 양대노총 공대위는 6월 18일 집회와 9월 공동 파업 계획을 내놓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 투쟁을 배치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그동안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양보 교섭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교섭권과 체결권 위임을 강조해 왔다. 물론 정부와 개별 공공기관 사측이 향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서 불리한 근거를 없애거나 투쟁 기세를 꺾기 위해 나중에라도 노사합의를 끌어내려 할 것이므로 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될 때 싸운다'며 합의는 거부하되 교섭은 유지해 일방적으로 강행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전술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성과연봉제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기본 전제일 뿐 저지 수단인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봐야 한다.

정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 편이 힘을 쓰는 걸 주저해서는 결코 공격을 저지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을 조직했다면 정치적 초점을 형성해 적어도 정부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투쟁의 전진을 위한 활동가들의 과제

공공운수노조가 7월 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그러지기 전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7월 파업을 부분 파업이나 하루 파업과 같은 상징적 경고 파업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켜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파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 활동가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파업과 투쟁 경험이 가장 풍부한 철도노조가 적극 나서도록 철도 활동가들은 지도부에게 촉구하고 동시에 기층 조합원들이 파업 태세를 갖추도록 조직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철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상당수 활동가들은 파업 여부가 쟁의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보는 듯하다. 물론 쟁의권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면 절차를 밟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쟁의권이 있어야만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쟁의권 확보 자체가 목적이 돼 정작 중요한 파업 조직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위가 철도공사 사측의 '교섭 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 신청을 각하해 버리면, 불법 파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임금교섭을 시작해 쟁의권을 얻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처할 길이 없을 것이다. 파업은 활동가들과 기층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투쟁 태세를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파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불법 논란과 탄압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향후 법률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불

법 도입을 밝혀 낼 수 있거나 단협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

“사회 통념”

법원 소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후이나 제기가 가능한 데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근 법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조차 잘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임금 삭감을 위한 행정지침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규정한 것은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단협 우선’도 노조의 힘으로 뒷받침해야만 강제할 수 있다. 철도에서 사측은 단협을 위반하며 신입사원 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아 현재 연봉제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불법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률적 수단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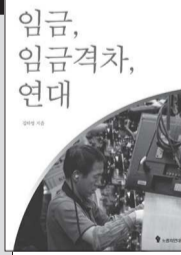
마침 20대 국회가 개원해 공공부문 국회 특위나 국회 내 쟁점화를 통해 성과연봉제 공격에 대응해 보자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 쟁점화도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을 벌이느냐에 달려 있다. 또 더민

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일관된 반대 입장이 아니라 불법적 도입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여소야대 국회를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국회 대응에 의존해 투쟁을 뒤로 미루거나 약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 공공부문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은 집요하게 지속될 것이다. 활동가들이 이에 맞서 강력한 파업과 투쟁을 굳건하게 건설해야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

추천 소책자



임금, 임금격차, 연대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136쪽, 4,000원

최근 임금소득 격차 증대의 본질과 그 정치적 함의, 노동조합과 임금격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비단 정부의 거짓을 들춰내기 위해서뿐 아니라 노동운동이 투쟁 방향을 제대로 잡는 데에도 중요하다. 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소득 상위 10%에 드는 게 사실 아닌가.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울수록 임금격차만 벌릴 뿐 아닌가 등의 냉소가 노동운동 안에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운동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 직면해 무기력한 대응을 낳을 약점들이 꽤 있다. 이 소책자는 이런 문제들(이론적·정치적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